국정농단 박근혜 통합 32년형 선고

1심 징역 24년에서 국고손실·공천개입 혐의 유죄 징역 8년 추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20일 모두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활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공천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해 32년이 됐다.

재판부는 특활비 부분과 관련해 "최소한 확인 절차도 안 걸친 채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로 하는 우선적 책임은 헌법 수호자이며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피고인의 혐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한다"면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며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 작성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뉴시스

손 맞잡은 민주평화당 당대표 후보들 민주평화당 당대표 선거 후보 토론회가 지난 20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전주MBC 공개홀에서 실시된 가운데 후보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경환, 유성엽, 정동영, 민영삼, 이윤석, 허영후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출마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제가 아직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다. 이제 저를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바치려 한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많은 분들이 당대표 출마를 권유했다. 오래 생각하고 많이 고민했다. 당의 중진으로 당과 정부에 기여해도 되지 않을까 수없이 자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동북아평화체제 전환 ▲21대 총선 승리 ▲당 혁신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저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자 한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북돋아 동북아평화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겠다.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재집권의 기반을 닦겠다. 민주당을 완전히 새로운 정당, 국민과 더불어 웃고 울며 더불어 사는 국민속의 정당으로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앞으로 2년간 집권당을 끌고 나갈 당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문재인정부와 시대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당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던질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靑, 계엄령 대비 계획 세부자료 공개

국정원·언론·국회 통제 계획 포함… 국회 대한 대책 마련도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 외에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전날 국방부를 통해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접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제출됐다"며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계엄 성공 위해서는 보안 유지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 돼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에는)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계엄사령부의 설치 위치도 보고 돼 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원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며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통제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 통해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며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국방부 계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건의 중요성과 관심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고 문건의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뉴시스

평화당 내달 5일 전당대회, 케이보팅·ARS 병행

다음달 5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평화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방식을 최종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의당에서 치렀던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케이보팅과 ARS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형구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뉴시스와 만나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케이보팅, 3~4일은 ARS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전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평화당은 이번 최고위를 통해 선거인명부도 확정했다. 이에 이번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은 총 9만513명이다. 기존 8만9927명에서 누락자 제외, 고문단 및 주소 미기재자 포함 등을 거쳤다.

아울러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도 진행했다.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 선출규정을 확실히 해놓은 것이다.

우선 여성·청년위원장 후보가 1명일 경우 최고위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후보가 1명일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해서 유효투표 중 과반을 넘기는 자가 당선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후보가 1명이면 불필요한 투표없이 최고위 의결만으로도 확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 후보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 여성위원장 선거는 무투표 당선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평화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허위취업 의혹 김무성 딸 부부 검찰 조사 마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부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 의원의 장녀 김모 씨와 남편 박모 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위이자 딸의 남편인 박모씨는 자신의 부인이 허위 취업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께 김 씨의 시아버지인 엔케이 박윤소 회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을 상대로는 며느리의 허위 취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와 또 다른 의혹인 엔케이의 수소충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가정주부인 김 의원의 딸은 시댁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에 허위 취업해 수년간에 걸쳐 3억 9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